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28호 | 2024년 8월 14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제79주년 광복절 특집호

뉴라이트는 역사왜곡, 정부는 대일굴종외교

- 제22대 국회가 앞장서 반국가적 역사왜곡 막자 -

박 혁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 요 약 》

■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국민?

-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하지 않는 일본 주장에 부화뇌동
- 한국인이 일본국민이 되었다는 주장은 일제의 모든 만행 용인하자는 것

■ 정부수립일이 광복절?

- 1948년 8.15 정부수립일이 광복절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
- 뉴라이트의 오래된 주장이며 건국절 논리의 초석

■ 뉴라이트의 행태는 반국가적 행위

- 일제의 식민지배 옹호하고 한국민의 독립운동과 광복 폄훼
-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막는 것이 일본의 역사왜곡 막는 지름길

■ 일제 식민지배 옹호처벌법(가칭) 제정

-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 역사 선동에 단호한 대응
 - 헌법에 반해 일제 식민통치 시기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
 -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 및 징병·징용생존자 및 그 유족과 후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국민?

○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하지 않는 일본 주장에 부화뇌동

- 불법적이고 원천 무효인 한일병합조약을 근거로 한국인이 일본국민이 되었다고 주장
 - 한일병합조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통치권이 일본으로 이양되어 한국인은 일본국민이 되었다고 주장
 -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인이 일본국민이 되었다는 주장은 일제의 강제적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합법화하는 논리
-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강점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
 - 한국 대법원은 2018년,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라고 명시

1910년 한일병합조약

-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의 자가당착

-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은 후보자 면접 당시 일본정부 입장 대변
 -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
 - 한일병합조약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일본 측 논리
-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나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는 모순적 주장
 - 일제의 강제동원 불법성도 부정될 수 있는 논리 제시
 - 독립기념관장의 입장과 학자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입장

○ 한국인이 일본국민이 되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 근거로 삼는 한국병합조약 자체가 불법적이고 원천 무효
 - 1967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
- 일제는 강점기 내내 자신들의 국적법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음
 - 일본은 식민지배하던 대만과 남사할린에는 자신들의 국적법을 실시한 반면, 조선인에 대해서는 해방이 될 때까지 자국의 국적법 시행하지 않음
 - 조선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은 일제에 의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 유지
-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적법은 8.15 이전의 한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
 - 국적법 제정 당시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8.15 이전에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8.15 이전부터로 확정’

국적법 제1독회(이인 법무부장관 발언)

“헌법 전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더라도 정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있어도 정부가 일시에 총사직을 한다든지 미처 조직을 못 했다든지 할 때 정부가 없을망정 국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종일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 이렇게 보아서 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1948.12.1.)

2. 정부수립일이 광복절?

○ 건국절 반대하니 뉴라이트 아니다?

- 김형석 신임 관장은 자신은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니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변
 - “저는 건국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 (향후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다면)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김형석, 8.12 기자회견)
 - 건국절 논란의 핵심은 건국절 제정의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독립운동, 일본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인식의 문제
- 뉴라이트 건국절 논리의 교묘한 위장
 - 자신은 1919년 건국 주장에도 반대한다면서 건국은 29년 간 지속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김형석, 8.12 기자회견)
 - 미국의 예를 들면서 1776년 7월 4일 독립 선언 이후 1783년 9월 3일 독립 인정을 거쳐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으로 건국이 완성되었다고 강조
 - 미국은 독립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 기념한다는 사실에는 침묵

○ 뉴라이트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주장

- 김형석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주장
 -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며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주장(2023.12,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연설)
-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주장은 역사 왜곡
 - 김형석 신임관장은 허술하고 교묘하게 사실 왜곡

김형석 발언

“1948년 8월 15일 날 처음에 이 4대 국경일을 제정할 때요. 그때 4대 국경일의 8월 15일은 첫 번째 명칭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이었고 1949년 8월 15일 날 제1회 독립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제헌국회 의록을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이 백관수 의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이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어진 이 뜻깊은 날을 기리되 1945년 8월 15일도 함께 기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는 용어보다 우리가 앞으로는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요.”(8.13. 김현정의 뉴스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8년이 아닌 1949년 10월에 제정
- 1948년 8월 15일의 첫 명칭이 국경일법에 독립기념일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 1949년 9월 21일 국경일법 심의 당시 정부안은 4대 국경일 명칭을 3.1절,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로 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해 통과시킴
- 국경일법 제정과정에서 백관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했다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어진 이 뜻깊은 날을 기리되 1945년 8월 15일도 함께 기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는 용어보다 우리가 앞으로는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발언은 회의록 어디에도 없는 소설(제5회 3차, 1949. 9.21 본회의 회의록)
- 김형석의 주장과 달리 1949년에 명칭이 “제1회 독립기념일”이라는 행사는 없었고, ‘대한민국독립 1주년 기념식’이 열림

○ 1948년 8.15 정부수립일이 광복절이라는 주장은 물역사적 인식

- 광복절이 1948년 8.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 건국절 주장의 초석
 - 뉴라이트의 대부, 이영훈은 오래 전부터 48년 8.15일이 ‘광복절’이고, 그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
 - 1949년 8월 15일에는 국경일법이 제정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 거행
 - 이영훈과 김형석은 이 행사명을 근거로 독립기념일 = 광복절 = 정부수립일이라는 논리
 -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을 광복절로 바꾸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고 주장

이영훈 발언

"대한민국 건국의 기억은 당초 '독립기념일'이었던 8월 15일이 '광복절'로 바뀌면서 혼란스러워졌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역대 정권이 이를 외면하거나 폄하하면서 약해져갔다."(이영훈, '건국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8.8.14.)

- 49년 8월 15일 행사의 분명한 성격은 정부수립 1주년, 광복 4주년 기념행사
 - 49년 8월 15일에 사용한 ‘대한민국독립 1주년 기념’이라는 말은 광복절을 대체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수립 1주년 기념’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 즉 미군정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의미
 - 당시 이승만 축사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도 사용
 -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도 기념사에서 “해방 4주년 기념일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독립의 1주년 기념일”이라고 언급.
 - 이승만과 신익희는 아직 광복절이라는 공식용어가 제정되기 전이어서 광복절이라는 말 대신 “제4회 해방일” “해방4주년 기념일” 등의 용어 사용
 - 당시 신문들은 1949년 8월 15일 정부가 개최한 행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이라고 명명

당시 언론 기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 거행 -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1주년 기념일인 작 15일에는 감격과 환희에 넘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대히 거행되어 축하와 새로운 결의의 만세성으로 지축을 흔들었거니와 서울에서는 시의 주최로 경축 국민대회가 오후 1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또한 성대히 거행되었다.”(경향신문, 49.8.16)

- 국경일법이 제정된 이후인 1950년부터 정부수립과 광복절 용어 공식 사용
 - “대한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인 동시에 제6회 광복절의 기념식은 지난 15일 시내 문화극장에서李大통령 및 각 장관, 외국사신, UN대표 등 내외귀빈 다수 임석 하에 성대히 거행되었다.”(대구매일, 1950년 08월 16일)
 - “36년간 기나긴 악몽 속에서 일제의 굴욕적인 식민지 통치를 받아오다가 드디어 일제의 악독한 죄사슬이 풀어진지 여섯 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서울신문 1951년 08월 16일)
- ‘48년 8.15일 광복절 = 건국절’ 주장은 반국가적 행태
 - 1950년 8월 15일 행사를 “제2회 광복절 기념식”, 1951년에 8월 부산 행사를 “제3회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광복절이 정부수립일이라고 강변(이영훈, 2018년 8.13)
 - 이승만 정부 때인 1958년에 정부는 광복 제13주년, 정부수립 제10주년 기념식(1958년 정부 공식 홍보물)
 - 대한민국정부는 1945년 8.15일을 기점으로 올해는 79주년 광복절로 공식 기념

3. 일본의 역사왜곡 부추기는 뉴라이트의 반국가적 행태

○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 함의

-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은 없던 나라를 비로소 창건했다는 의미
 - 건국절 주장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항일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논리
 - 뉴라이트의 건국절을 용인할 경우 한일합병조약으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민은 일본국민이 되었고, 친일행위나 위안부, 징용 등도 일본국민으로서 당연했다는 결론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항일독립투쟁을 높게 평가하고 친일파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좌파로 몰아 탄압 하는 등의 이념전쟁 정당화
- 건국절 논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의 행위를 폄훼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역사 부정
 - 김구, 윤봉길,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을 비하하며 오히려 테러리스트라고 모욕
 -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 부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
 - 대신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간주해 그 주역 이승만을 추앙

○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 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 한국독립을 위한 서구 열강들의 결정적인 결의가 담긴 **카이로 선언**에 '적절한 시점(in due course)'에서 한국은 자유독립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아시아식민지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담대하고 뛰어난 외교력 때문에 가능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결의' 누가 이끌었나, "김구-장제스 功 확인" 한시준 교수 中사료 발굴]

한시준 교수는 "중국은 소련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독립에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장제스를 직접 만난 임정 요인들의 외교가 카이로 선언문에 한국 독립 보장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4.03.19)

- 이승만 또한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 삽입의 공로를 윤봉길·김구 등에게 돌림

[이승만의 발언]

"윤 의사의 장거(壯舉)가 있는 후로 중국 관민(官民)의 한인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와 신뢰로 일변해 한·중 양국은 자고로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니, 국민정부는 물론이요 **장개석 주석부터가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해 음으로 양으로 대한임시정부를 성원해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도 한국 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주석이 숭선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 원인이 윤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이승만, 『도왜실기(屠倭實記)』의 국역판 '서문', 2014, 범우사)

○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막는 것이 일본의 역사왜곡 막는 지름길

-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의 득세가 대일굴종외교, 일본의 역사 도발 부추기고 있음
 - 독립기념관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진실화해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위원회 등 역사 관련 기관장들을 모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차지
 - 정부는 2023 일본개항 개정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대한 설명 삭제
 - 1996년부터 역대정부는 '일본개항'에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와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옴
 - 그 틈을 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 왜곡 등 기고만장 행태 지속
 - 최근에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제대로 전시를 이행할 방안을 추진할 지 미지수
- 뉴라이트의 행태는 학술활동 아닌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대중선동
 - 수많은 연구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
 -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를 넘어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

○ 일제 식민지배 옹호처벌법(가칭) 제정

-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 역사 선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 시급
-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항일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파괴 행위
 - 헌법에 반해 일제 식민통치 시기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거나
 -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
 -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 및 징병·징용생존자 및 그 유족과 후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필요

-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 적극 추진

-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처벌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 고려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해 왔던 입법 노력 지속해야 함
 - * 원희룡(2005):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 * 이종걸(2013):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 * 홍익표(2013):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박광온(2018):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토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